

# 한국 언론의 전문직주의와 전문직 프로젝트의 특수성

## 언론-정치 병행관계의 한국적 맥락

박진우 건국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조교수\*

이 연구는 한국의 언론인 전문직주의와 전문직 프로젝트의 특수성에 대한 해명을 통해 한국의 언론과 정치권력의 관계를 이해하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자 한다. 여기서 전문직주의의 문제들은 한국 언론과 정치권력의 오랜 병행 관계를 새롭게 개념화할 수 있는 매개체로 간주된다. 한국 언론의 경제적 위기, 정치적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의 상대적인 쇠퇴, 그리고 디지털 뉴스 혁명이 가져온 뉴스 생태계의 변화 속에서 전문직 저널리스트의 위상 역시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연구는 첫째, 언론인 전문직주의의 규범론적 관점에서 탈피하여 한국 언론의 현실을 전문직 프로젝트의 역사적·구조적 경과라는 차원에서 접근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행위자 중심적인 관점에서 저널리스트 전문직의 현실적인 쟁점 - 경제적 이해, 사회적 폐쇄, 국가권력과의 규제협상 - 에 대한 평가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대 사회에서 두드러지고 있는 저널리즘과 민주주의의 디커플링 현상을 심화시키는 한국의 전문직 프로젝트의 특수성에 새롭게 접근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가-언론의 오랜 비대칭적 관계 속에서 실현 가능한 전문직 저널리즘의 모델을 새롭게 고민하는 단초를 살펴보고자 한다.

**KEYWORDS** 미디어 시스템, 언론-정치 병행관계, 전문직주의, 전문직 프로젝트

---

\* jinwoo421@gmail.com

## 1. 문제 제기

한국의 저널리즘과 민주주의, 그리고 언론사와 정치권력의 관계에 대한 논의에서 그동안 부차적인 문제로 간주되었던 것이 바로 언론 활동의 주체인 저널리스트에 대한 검토이다. 저널리스트는 정치권력, 민주주의와 언론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규정짓는 가장 중요한 행위자이다. 이를 개념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전문직 저널리스트의 성립과 발전, 전문직주의 (professionalism)의 등장 문제를 함께 다루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그리고 이 연구의 목적은 전문직 저널리스트와 전문직주의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한국의 언론과 정치권력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마련하는 일이다.

하지만 이 문제는 결코 간단치 않다. 저널리스트가 전문직인가 아닌가를 둘러싼 오랜 논쟁은 사실 종지부를 찍을 수 없는 성격의 것이다. 게다가 언론과 정치권력의 관계에서 오랫동안 지적된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권언유착’, 혹은 ‘정치와 언론의 병행관계 (parallelism)’를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원동력을 전문직주의의 강화에서 찾을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혹시 한국 언론 전문직주의의 역사 그 자체가 정치와 언론의 유착 관계의 산물이 아닌지, 따라서 전문직주의의 스스로가 해체 혹은 극복의 대상인지도 이제는 함께 물어보아야 할 시점이다. 게다가 국내외를 막론하고 저널리스트 전문직의 미래에 대한 논의들은 결코 장미빛 전망이 아니다. 즉 디지털 환경에서 저널리즘 실천의 패러다임 자체가 변모하는 과정에서 과연 과거와 같은 전문직주의 모델이 앞으로도 유효할 것인지도 의문이다. 여하튼 뉴스 산업의 위기, 민주주의의 위기, 그리고 언론 전문직의 위기가 중첩되어 있는 현재의 상황은 언론과 민주주의의 오랜 병행 관계 자체가 붕괴할 수도 혹은 강화될 수도 있는 분기점이다. 이 상황에서 한국 언론의 전문직주의를 검토하는 일은 과거보다 훨씬 치밀하고 체계적인 작업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이 연구가 이상의 시대적인 변화와 과제를 모두 감당하기는 불가능하다. 대신 다음 두 가지 쟁점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보고자 한다.

첫째, 이 연구는 전문직주의를 논의하는 이론적 틀 자체를 시대적 변화에 맞게 갱신해 나갈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는 오랫동안 직업적 저널리스트를 둘러싼 논의의 틀을 결정해 왔던 규범론적 전제와 이를 설명하는 외부의 ‘체계’ 요인들에 대한 논의 틀의 갱신에서 시작된다. 그럼으로써 전문직 언론인들이 스스로 구축해 나갔던 ‘전문직 프로젝트’의 구조적 작동 방식에 관한 보다 현실적인 진단이 가능해질 것이다. 그 과정에서 대다수 학자들이 동의하는 한국 저널리즘의 ‘전문직주의 결여’라는 규범적 비판을 보다 역사화·구조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한국 언론의 전문직 논의를 둘러싼 주요한 이론적 전제들이 ‘디커플링(de-coupling)’되는 양상들을 조금 더 진지하게 진단해 보고자 한다. 이는 언론과 정치권력의 관계, 그 속에서 전문직 저널리스트의 유형을 체계화하는 작업 속에 전제되는 논리적 연관 사슬에 대해 관성적으로 당연시하지는 말자는 뜻이다. 오늘날 각국 저널리즘에서 나타나는 전문직주의의 양상은 객관주의 언론과 직업적 자율성, 그리고 민주주의적 책무라는 측면에서 그 실체가 매우 다양하다(Hallin & Mancini, 2010; 2011). 그 속에서 민주주의와 저널리즘의 규범적·논리적 연관의 디커플링 현상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Christians et al., 2009; Josephi, 2013; Nerone, 2013). 한국 언론의 역사에서 나타나는 정치권력과의 병행 혹은 유착 관계 역시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율성이 신장되면서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 규범적 요구를 부차화 시킨 적극적인 ‘직업적 프로젝트’의 결과물일 수 있다. 만약 이러한 가설이 성립하려면, 먼저 한국 사회에서 전문직 저널리스트와 전문직주의를 구성하였던 내적 규범과 이를 둘러싼 외적 환경들 사이에 성립되었던 매우 현실적인 논리적 연관 고리들을 보다 치밀하게 살펴보아야만 한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전문직주의라는 것 자체에 대한 일종의 ‘탈신화화’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논의들을 통해 이 연구는 궁극적으로 정치권력과 언론의 관계에 대하여 ‘병행 관계’ 혹은 ‘유착 관계’라는 개념을 넘어서는 새로운 역사적·이론적 범주가 제기될 수 있는지를 한번 질문해 보고자 한다. 한국 언론의 지난 100년의 역사에서 권언유착과 ‘정치적 굴종’이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새로운 언론 환경에서는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하고 민주주의와 공공선을 위한 사회적 책무를 감당할 수 있는 또 다른 전문직 저널리즘 모델을 어떻게 고민할 것인지, 또 그 과정에서 전문직주의가 어느 정도까지 갱신되어야 하는지를 질문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에 대한 해답은 아직은 없다. 다만 그러한 작업이 오늘날과 같은 민주주의의 후퇴의 시기, 그리고 급변하는 디지털 미디어의 시대에 전문직 저널리즘의 가능성에 여전히 관심을 기울이는 가운데 그 해답의 단초를 하나씩 마련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2. 이론적 쟁점: 언론인 전문직주의와 전문직 프로젝트

이 장에서 우선 다룰 내용은 전문직 연구의 전통에 비추어 저널리스트 전문직을 논의해 왔던 기존의 연구들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다. 이는 ‘언론인은 전문직인가’라는 오랜 질문이 ‘언론인은 전문직이어야 한다’는 답변으로 귀결되는 과정으로부터 일정하게 거리를 두는

것에서 시작된다. 대신 언론인이 전문직이기 위해 스스로 어떻게 행동하였는지에 대한 보다 현실적이고 구조적인 양상에 대한 문제로 관심을 이동시켜 보고자 한다.

### 1) 언론인의 전문성과 전문직주의: 규범적 전통과 쟁점

우선 전문직과 전문직주의에 대한 몇 가지 이론적 해명이 필요하다. 먼저 ‘전통적’인 전문직주의 모델과 그것이 규범적 전제들에서 시작해 보자. 전문직이라는 이론적 가정은 일종의 이념형(idealtypе)으로서, 여기서 규범적인 전제들은 불가피하다(Christians et al., 2009). 이를 반영하듯 언론인 전문직주의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우선 언론인이 수행하는 사회적인 역할, 민주주의에 대한 기여를 전제하고, 이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조건들—객관주의의 규범과 취재 관행, 제도적 성취의 수준 등—을 점검하는 형태를 취한다(임영호, 2006; 김경모·신의경, 2013). 하지만 규범적 차원을 전문직주의의 중요한 구성 요소의 하나로 다루는 것을 넘어서 논의 전체를 규범적 전제에 입각해서 진행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여기서는 전문직주의의 규범 자체의 중요성보다는 규범이 작동하는 현실적인 과정에 더 주목한다. 그럴 경우, 논의의 대상과 방식은 조금 달라진다.

알려진 대로 전문직의 개념은 고전사회학의 사회적 분업 및 직업론에서 출발한다. 뒤르케임(Durkehim)과 베버(Weber)의 이론은 직업의 분화와 전문직의 출현, 그리고 이들에게 요구되는 ‘신성한 직업’의 다양한 전제들—공적 임무, 사회적 정당성 획득, 공공선과 민주주의에 대한 기여—에 대한 논의의 출발점이었다. 뒤르케임은 직업의 분화와 전문직화를 근대의 사회적 분업의 확산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그는 전문직이라는 특정 직업 영역의 분화 과정을 과거보다 더욱 높은 품질(퀄리티)의 직업적 분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서 기인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높은 사회적 지위에 걸맞은 공공선(public good)과 민주주의에 대한 기여라는 보다 중요한 사회적·도덕적 책임이 이들에게 부여되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현상들을 개인의 자유를 신장시키고, 전체 사회의 유기적 연대를 심화시키는 중요한 수단으로 바라보았다(Durkheim, 1998).

뒤르케임의 논의는 명백히 당대 서구 사회에서 출현한 각종 ‘화이트칼라’ 직종 일반에 관한 것으로, 이들의 사회적 지위는 육체노동자들과는 구분되는 내적인 상징자본에 따른 것이다(Schinkel & Noordegraaf, 2011). 그리고 이는 근대 국가의 관료주의적 합리성과 사회적 정당성에 대한 베버의 논의와 결합되면서, 1930년대 이후의 구조기능주의 사회학의 주요한 전제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제 특정한 유형의 직업 혹은 이들에게서 유래한 특정한 속성을 가진 제도를 지칭하는 ‘전문직(profession)’이라는 개념이 단순히 지식에 기반을 둔 ‘전문가(expert)’ 개념과 구분되었다. 그리고 사회 체계의 분화 과정에서 특수한 시

장을 형성하고 그 속에서 조직을 결성하여 자신의 직업을 수행하며, 또한 조직을 통해 자신들의 강력한 직업적 정체성과 가치를 실현하며, 나아가 이를 통해 대중들과의 협력 및 신뢰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집단으로서의 '전문직' 개념이 차츰 일반화되기 시작하였다 (Freidson, 2007).

전문직 언론인에 대한 논의 또한 원천적으로는 이러한 이론적 자원에서 출발한 것이다. 하지만 제도와 규범의 분화 및 확립의 이면에는 제도와 규범의 현실적인 기능에 대한 인식도 함께 자리 잡고 있다. 네론은 전문직 언론인의 이념이 언론인들 스스로를 고용한 언론사 소유주 및 국가 권력에 대하여 가지는 자율성과 대중들에 대한 책임의 정당성 원천으로 기능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Nerone, 2013). 전문직주의 모델은 현실적으로 19세기 서구에서 발생한 독점적인 일간지의 시대에 저널리스트와 언론 소유주, 그리고 국가가 맺은 암묵적 계약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저널리스트는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를 대변함으로써 자신들을 고용한 언론사 소유주들에 대한 독립성을 주장할 수 있는 양가적인 지위를 가진다. 언론사 소유주들 역시 저널리스트들에게 자율적인 규범을 준수토록 허용하는 대가로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시키고, 또 그 과정에서 대중들이나 국가 권력이 자사를 비판하는 것을 무력화시키는 중요한 정당성 원천을 획득하게 된다. 국가권력 역시 저널리스트와 미디어 소유주들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대가로, 권위적 억압과 통제를 통한 전체 시스템 유지에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Nerone, 2013, 450쪽). 이런 측면에서 전문직 언론인에 대한 규범적 동의는 저널리스트, 언론사, 그리고 국가권력 모두가 시스템 전체를 가장 효율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맺은 상호 계약 그 자체일 수 있다.

규범론적·구조기능주의적 패러다임을 따르는 전문직 논의는 대체로 해당 직종에 대한 특성중심 접근방법(trait approach)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 이는 해당 직종이 전문직으로 구분될 수 있는 '전문성'의 고유한 지표들—예컨대 과학적·체계적 지식을 근간으로 한 작업 방식, 정규 교육 시스템, 자기규제적 협회의 조직, 윤리 강령의 채택, 고객과의 신뢰 관계, 이에 따른 사회적 존중 등—을 얼마나 충족시키고 있는지를 통해 전문직주의의 수준을 가늠하는 방식이다. 1950~60년대 미국 언론학에서 벌어진 '저널리스트 전문직 논쟁'의 대다수는 이러한 방법적 기준을 따랐으며, 과연 저널리스트가 전문직인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이는 지금도 그러하다)(McLeod & Hawley, 1964; Weaver et al., 2007).

이러한 발상은 사실 역설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앞서 언급한 대로 전문직이 '이념형'의 차원을 가지는 것이기에, 전 세계에서 현실적으로 언론인이 전문직의 특정 기준을 완전히 충족시키는 경우는 결코 그 수가 많지 않다. 대신 당위와 규범이 전면화된다. 즉 '언론인은 전문직인가'라는 질문은 '언론인은 전문직이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지만, 답변을 통해

전제의 정당성이 한층 강화되는 것이다. 이어서 언론인의 현실적인 작업 기준과 직업 관행 속에서 전문직주의의 지표를 찾으려는 대안적이고 실천적인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미국에서 시작된 객관주의 보도의 관행과 규범, 그리고 유럽에서의 언론 자율성의 이념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Waisbord, 2013). ‘퀄리티 리포팅’을 위한 절차와 훈련, 지식 습득과 관행의 확립, 그리고 직업적 자율성 유지를 위한 규범적·제도적 노력이 언론인 전문직주의의 핵심적인 요소로 부상한다.

하지만 이것 역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한다. 객관주의와 자율성의 이념 역시 ‘이념형’에 가깝기 때문이다. 물론 그것은 저널리즘과 민주주의, 그리고 전문직 언론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행위 준거이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다만 그것이 반드시 언론인의 전문성과 전문직 언론인의 현실 모두를 설명하지는 않는다. 또한 언론인들이 전문직종으로 형성되는 과정을 이러한 규범적 지표들만으로 설명할 수도 없다. 여기서 바로 언론인 전문직주의의 ‘이념’이 가지는 비판의 현실성과 적절성 차원의 문제가 제기된다.

## 2) 전문직 프로젝트: 역사구조적 관점에서의 전환

‘전문직 프로젝트’의 문제 설정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 이론적 대안으로 제출된 것이다. 최초의 문제제기는 1960년대 서구에서 산업사회가 성숙하면서 더 이상 화이트칼라의 사회적 자율성을 강조하는 것이 무의미해진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휴즈(Hughes, 1963, 655쪽)는 “이 직업이 과연 전문직인가 하는 질문은 더 이상 무의미하며, 대신 무엇이 이 직업을 전문직으로 만들며 또 그것은 어떤 환경에서 이루어지는가”라는 질문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전문직으로 만들기 위해 일상적으로 해당 직업 집단이 어떤 전략적인 노력을 행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논의의 초점을 이동시켜야 한다는 것이다(Sarfatti-Larson, 1977). 사르파티 라슨은 이러한 맥락에서 누가 어떤 방법으로 스스로 전문직이고자 노력하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해당 직종의 전문직화 과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전문직 프로젝트’라고 명명한다.

그런 면에서 전문직 프로젝트는 ‘규범적 관점’보다는 행위이론에 입각한 ‘행위자 관점’에 근거한 설명 방식이다. 전문직(단체)은 하나의 행위자로서 ① 특정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② 특정 업무 분야에 대한 독점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이며, ③ 이를 위해 자신들이 가진 경제적·조직적·문화적 자산을 전략적으로 동원하는 주체에 해당한다(Sarfatti-Larson, 1977, 66쪽). 더불어 현대 사회의 ‘지식의 전문화’ 추세에 발맞추어 ④ 자신들의 지식이 보다 전문적인 것으로 사회적인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며, ⑤ 해당 지식 소유자들의 배타적인 조직 형성을 도모하며, ⑥ 마지막으로 국민국가와의 교섭을 통해 구성원의 자격

을 제한할 수 있는 사회적 폐쇄를 획득하고자 한다(MacDonald, 1999, 36쪽).

이 같은 전문직 프로젝트는 사실상 ‘배제(exclusion)’와 ‘사회적 폐쇄(social closure)’를 통한 독점적인 이익 추구의 과정에 다름 아니다(Freidson, 2007). 곧, 특정 분야의 ‘과학적 지식’에 대한 배타적 이용에 근거하여 서비스를 독점적으로 장악하게 되는 관행을 핵심으로 삼는다. 이러한 접근법은 한편으로 이념형적인 전문직주의 모델의 특성을 통해 실제 전문직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에서 탈피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전문직에 관련된 규범적 범주 외부에 존재하는 사회적·경제적 이익 추구라는 보다 현실적인 쟁점을 분석의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만든다. 특정 전문직 프로젝트에서 체계화되고 전유되는 특수한 지식 체계 또한 전문직 프로젝트 속의 내부적·외부적인 통제와 폐쇄의 메커니즘에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게다가 전문직 저널리즘의 이념에서 외부적 대상으로 간주되어 왔던 ‘국가권력’을 논의의 필수적인 구성 요소로 간주하게 되는 장점을 가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의 전문직 저널리스트의 모델 또한 스스로를 전문직으로 정립해 나가기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하였으며 그 결과는 어떠한지를 질문해 볼 수 있다. 언론인 직종이 여타 직종들과 그리고 직종 내부적으로 어떤 투쟁과 갈등을 거쳐 왔으며, 이를 조정하고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도 물어야 한다. 웨이스보드(Waisbord, 2013)의 논의를 참조하여 질문의 영역을 크게 경제적 통제, 관할 영역의 투쟁, 그리고 지식 및 가치 체계의 확립이라는 3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자신들이 보유한 지식 및 가치체계의 독자성 확보의 노력에 관한 것이다. 프라이트슨은 이러한 특권에 대한 사회적 동의는 해당 직종이 보유한 특수한 지식 체계를 다루는 능력에서 궁극적으로 비롯된 것으로, 그것 자체는 결코 정치적·경제적 권력에 기반을 둔 관료주의적·시장적인 메커니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Freidson, 2007). 물론 언론인들에게는 해당 지식이 그리 배타적이지 않고 또 충분히 체계적이고 추상적이지 않다는 점이 지속적인 논쟁점으로 부각된다(Abbott, 1988). 따라서 언론인들에게는 전문직이라는 패러다임 자체의 적용을 정당화하기 위해 전문직 패러다임의 내부와 외부에서 작동하는 다양한 담론들에서 유래한 권위를 활용하는 새로운 전략을 모색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된다. 서구 사회에서는 언론인들이 귀족적 교육이나 인문교육과 같은 전문지식의 독립을 위한 ‘전통적 수단’ 대신 보다 체계적인 훈련과 시험, 그리고 직종단체와 대학을 적극 활용하는 ‘근대적 수단’을 행위 전략으로 채택한 바 있다. 미국의 경우 20세기 초반부터 직종단체 혹은 대학의 사회적 위신과 명망에 기대어 자신들의 노하우를 전수 가능한 형태로 체계화하고, 아울러 그 지식을 독점하려는 경향(일종의 ‘자격증주의(credentialism)’적 경향)이 확산되어 나갔다(Zelizer, 2013).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자적 지식(distinct

knowledge)’이 아닌 ‘독자적 실천 관행(distinct practices)’이 체계적으로 교육되고 전수된 것에 가깝다는 사실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둘째는 관할 영역 확보를 위한 노력, 곧 ‘사회적 폐쇄’를 위한 노력이다. 사회적 집단들은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타인들을 자기 집단으로부터 배제함과 동시에 타 집단의 특권을 빼앗고자 한다는 오랜 베버주의적 명제가 여기서 작동한다. 전문직의 경계와 범위는 결국 사회가 자신의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는 범위이기도 한 만큼, 이러한 작업은 일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푸코(Foucault)의 유명한 ‘지식/권력(knowledge/power)’ 명제, 부르디외(Bourdieu)의 ‘장(champs)’ 이론 모두 경계 자체를 확정하기 위한 사회적 집단 간의 차별화 및 투쟁—소위 ‘경계 작업(boundary work)’—의 행위 양식에 대한 것이다(Benson & Neveu, 2005). 저널리스트들이 특정한 취재원에게 접근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것, 그리고 취재원 보호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 등은 바로 이러한 영역 투쟁의 대표적이고 또 성공적인 사례이다(Abbott, 1988).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평가해서 저널리즘은 사회적 폐쇄라는 관점에서 ‘매우 취약한 자율성’밖에 성취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다(Carlson & Lewis, 2015).

마지막 셋째는 경제적 통제를 위한 규제협상(regulative bargain)의 노력이다. 전문직은 우선 자신의 직종에 대하여 경제적으로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데, 이러한 권리 획득은 국가의 협조 혹은 최소한 방조라도 없으면 실현하기 힘들다. 국가는 전문직 활동에 대한 면허 부여, 실천과 규제의 기준 설정, 직업 교육의 법적 효력 부여 등의 형태로 그 정당성을 보장해 준다. 전문직은 그러한 ‘통치의 보호막’ 속에서 교육과 훈련—면허, 자격시험, 졸업장 등—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재생산한다(Sarfatti-Larson, 1977). 그렇기에 규제협상은 “사회적 선(善)의 봉사자와 권력을 휘두르는 자”(MacDonald, 1999, 25)라는 양가적인 인식을 통해 전문직을 대중들의 존경과 냉소를 때로는 동시에 받는 권력 주체로 만드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국가권력과 전문직(저널리스트)의 관계는 이제 지속적인 상호 의존과 침투 관계 속으로 접어들게 되며, 양자 간의 힘의 대칭성/비대칭성의 정도에 따라 국가가 전문직의 존립 기반에 대단히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 3. 한국 언론에서 나타난 전문직 프로젝트: 진단과 평가

한국 언론의 전문직주의의 현단계, 그리고 전문직 프로젝트의 역사적 과정을 진단하는 문제는 한국 언론의 현 상황을 검토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주제이다. 이 문제에 대한 일반



적인 인식은 비교적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경우가 많다. 그것은 전문직 저널리즘의 이념과 규범의 차원에서도, 또한 전문직 프로젝트의 역사적 차원에 대한 평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우선 현재 한국의 언론은 저널리스트를 전문직으로 판단하기에는 매우 취약한 수준의 제도화 성과만을 보여주고 있다(임영호, 2006)<sup>1)</sup>. 이는 전문직 저널리즘의 성취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불완전함을 의미한다. 현실적으로 언론인에 대한 법적 지위 규정의 결여, 공유된 직업 규범 혹은 문화적 가치의 결여, 전문직 제도(직능단체, 언론인 교육 시스템 등)의 결여, 저널리즘 산업 위기 상황에 대한 공동 대처의 어려움(매체 간 및 매체 내부에서의 경쟁 구조, 이에 따른 공유된 가치의 전적인 결여, 디지털화에 대한 공동 대처의 부재 등)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여전히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임영호, 2006; 김경모·신의경, 2013; 조항제, 2014; 이정환 외, 2015). 이 점에 대한 현실적인 비판은 여전히 시급하다.

하지만 또 다른 논의도 필요하다. 한국 언론의 전문직화 과정에서 전문직주의가 실제로 구체화된 모습이 모두의 예상과는 다른 것일 수 있다는 논의가 그것이다. 이 문제를 규범적 기준에 비추어 일종의 결여 혹은 미달로 파악하는 것도 나름의 의미—특히 오늘날의 상황에서 규범적 기준이 가지는 강제력이라는 차원에서의 정치적·사회적 의미—가 분명히 있지만, 현실 속에서 관철된 한국 언론의 ‘전문직주의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를 가로막고 있는지도 모른다.<sup>2)</sup> 또한 그렇다면 전문직주의의 회복이 현재 한국 언론이 처한 심각한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해답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본격적으로 검토되지는 않고 있다. 그것은 어떤 형태의 전문직주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도 마찬가지이다. 오늘날과 같이 전 세계적으로 ‘저널리즘과 민주주의의 디커플링 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직주의의 비전이 과연 한국 사회의 정치권력과 언론의 특수한 구조적 관계의 문제와 어떤 식으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따져볼 대목이 적지 않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기서는 한국 언론에서 나타나는 전문직주의의 양상을 언

1) 예컨대 2015년 5월에 있었던 미디어 비평지 『미디어오늘』 20주년 기념행사에서도 전문직주의의 문제가 다루어졌다. 토론 패널들에 의해 “기레기”의 시대(김주언)에 언론인은 과연 “누구에게 충성할 것인가”(김민정)라는 질문이 제기되었고, 이제 언론인들이 “권력을 버리고 권위를 갖추자”(박수택)는 제안이 이루어졌다. “왜 언론인의 전문성과 윤리성은 육성되고 보호되어야 하는가”(김위근)에 대한 설명에서, “저널리즘 스푼이 필요하다”(이봉현)는 구체적인 언급까지 다루어졌다(『미디어오늘』, 창간 20주년 특별판, 86~93쪽). 한국 언론의 전문직주의를 둘러싼 주요 쟁점인 정치권력과 관계 문제, 그리고 전문직 내적인 규범과 제도에 관한 문제가 여기서도 나란히 거론되고 있다.

2) 따라서 다음과 같은 주장에 적극 동의하게 된다. “한국 매체 체계 모형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공표된 규범을 ‘팔호치고’ 그것이 어떻게 실행을 통해서 드러나는지 더 면밀히 고찰해야 할 것이다. 규범과 실천의 불일치 자체가 한국적 특성의 기초를 형성하고 있다고 적극적으로 이론화하는 것이 필요하다”(이준웅 외, 2010, 103쪽).

론 산업과 정치권력과의 삼각관계 속의 행위자적 관점에서 살펴보겠다.

### 1) 전문직주의 규범과 현실의 단절 혹은 상호 대립

전문직주의 규범의 문제와 관련하여 우선 한국 언론에서 가장 뚜렷이 관찰되는 현상은 전문직주의가 전제하는 뚜렷한 규범적 지향들이 현실은 물론 자신의 내부에서도 급격히 단절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전문직주의가 매개하는 언론과 정치권력의 매우 비대칭적인 관계를 야기하는 중요한 대목이다. 현대의 조직화된 자본주의 사회에서 전문직주의 규범은 탈중앙집중화된 직업적 통제와 자율적 규제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이기도 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규범의 실현 가능성을 이해하기 위한 현실적인 조건들을 검토하는 작업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이다(Christians et al. 2009; Evett, 2011, 2013).

오늘날 한국에서는 전문직주의 규범 자체가 위기에 처한 양상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많은 사례 중에서 객관주의 보도와 자율성의 이념을 한국 언론이 수용한 방식에 대한 연구들을 언급해 볼 수 있겠다. 유선영(1995)은 역사적인 관점에서 한국에서 객관주의 저널리즘의 이념이 단지 형식적인 차원에 그치고 체화되지 못하였다고 지적한 바 있다. 즉 객관주의 인식의 본령이라 할 수 있는 현실의 정확한 반영, 경험적 관찰보도 등의 이념이 단지 중립적 언어 사용이나 역피라미드 기사 등과 같은 기술적인 측면에서만 수용되었다는 것이다. 남재일(2008)은 구조적 현상보다 일화적 사건에 주목하고, 심층적 해석보다 표피적 사실관계의 나열식 기술을 우월하게 간주하는 한국 언론의 '탈정치적 사건중심 보도 관행' 속에서 이러한 이념과 현실의 괴리를 발견한다. 그는 이것이 한국의 '형식화된 객관주의의 전형'이라고 진단한다. 김경모·정은령(2012)은 전문직주의의 규범적 핵심인 외부적 압력으로부터의 자율성이라는 이념을 너무나 손쉽게 저버리고, 나아가 객관주의 형식관행을 통해 정권의 폭력이나 시장논리와의 타협을 정당화하는 사례들을 지적한다. 몇 가지 단편적인 사례들 속의 공통점은 비교적 뚜렷하다. 이는 단순한 '미성숙' 혹은 체화 수준의 미달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규범과 현실이 서로 다른 논리 속에서 괴리 혹은 분할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인식이다.

규범과 현실의 단절은 특히 전문직주의의 이념이 언론 조직의 경제적 전망과 충돌하는 경우에 가장 심각하게 드러난다. 원칙적으로 매체 시장이 발전하고 경제적 기반이 확고해지면 여타의 정치·사회 조직의 재정적 지원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며 보다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언론 기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커진다. 핼린과 만치니(Hallin and Mancini, 2010)가 제시한 미디어 시스템 이론에서 보여준 대칭적인 정치-언론 병행 모델은 경제적 성장이 전문직주의의 발전 및 정치 병행성의 완화로 이어진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한국 언

론의 역사는 언론사의 경제적 성장이 편집에 대한 경영의 우위, 언론 조직의 과도한 상업화, 그리고 조직 내적인 위계구조의 재생산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이정훈·김균(2006, 79쪽)은 “1990년대 초부터 본격화된 무한경쟁체제는 전문직이면서 지식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은 더욱 약화되고 ‘우리 신문’, ‘우리 방송’이라는 기업종업원으로서의 의식이 한층 두드러지게 되었다”고 말한다. 이들은 이를 ‘언론인의 샐러리맨화’라고 규정한다. 다른 한편,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억압적 국가권력과 관계에서 언론인들은 스스로를 극도로 수동적인 ‘준공무원’의 모습으로 만들어 나갔다(박승관·장경섭, 2000).

그리고 이러한 구조적 변수는 위기의 시대에도 동일한 결과를 가져왔다. 위기일수록 저널리스트의 기업 조직에 대한 몰입도가 증가하고, 그 결과 ‘기업 종사자’로서의 직업적 정체성이 한층 강화되는 동일한 패턴이 관찰된다는 점이다. 이는 언론 기업의 경제적 성장이 언론인의 자율성 신장과 사실상 무관하였음을 보여준다. 언론 기업 종사자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전통적인) 유기적 지식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숙명적으로 병행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양자가 갈등하는 상황을 한국 언론은 체계적으로 창출해 왔고(정치권력은 바로 이러한 창출 과정에 개입한다), 그 속에서 언론인들은 호황과 위기 국면을 가리지 않고 특정한 경향을 뚜렷하게 선택해 왔다. 전문직주의가 상정하는 동료 집단에 대한 신뢰와 유대감, 독자들에 대한 책무 의식이 이러한 선택을 가로막은 흔적은—몇몇 희생적인 소수들을 제외한다면—눈에 잘 띄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개인적 일탈’의 문제일 수 없다. 이미 구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조직적 일탈’의 형태이자, 어쩌면 그것이 곧 ‘정체성’의 형태일 수 있다. 한국 언론의 전문직주의의 실체를 추적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가시화되고 있는 ‘저널리즘 규범과 민주주의의 디커플링’ 양상에 대한 보다 치밀하고 실제적인 기록과 분석은 여전히 필수적이다.

## 2) 언론기업의 성장과 국가권력 개입의 비대칭적 관계

한국 언론의 전문직주의에서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상황적 변수는 바로 언론 기업의 성장과 국가권력 개입의 비대칭적인 관계이다. 한국에서 언론 기업의 성장과 정치적 중립성의 증대는 반드시 필연적인 연관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무엇보다 이는 저널리스트의 자율성을 무기로 국가권력 및 독자 대중들과 상호 교섭하는 언론사 소유주의 고전적 전략과는 다른 차원의 행위 전략이 한국 언론의 역사를 관통하였기 때문이다.

다수의 연구들은 1987년 이후에 진행된 민주주의로의 이행이라는 정치적 지형 변화와 보수 신문 중심의 새로운 시장 전략이 맞물리는 과정에 주목한다(양승목, 1995; 윤영철, 1995; 박승관·장경섭, 2000; 이준웅 외, 2010; 조항제, 2014). 여기서 가장 큰 주목을 끄는

대목은 한국에서 언론이 ‘독립적 권력기관’으로 성장하게 된 역사적 과정이다. 즉 1987년 이후 한국 사회에서 권위주의 정권이 퇴조하고 정치적 민주화가 이루어지면서 언론의 자율성과 영향력이 크게 신장되었지만 시민사회는 여전히 미성숙한 단계였기에, 그 틈새에서 언론이 자기 권력의 강화에 성공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 연구들은 언론 자체에 대해—한국 언론의 전문직주의의 ‘결여’의 대표적인 형태로 간주되는—‘권언유착’의 과정을 통해 언론이 스스로를 자율적인 ‘유사 권력기관’으로 변화시켜 나갔다고 설명한다.

הל린과 만치니(Hallin & Mancini, 2010)의 ‘정치[정당-언론 병행관계] 개념은 언론과 정당의 이념적 노선이 조응하는 정도를 지칭한다. 그들은 이 개념이 언론의 내용이 갖는 이념성, 인적·조직적 수준에서 언론과 정당의 연계성, 언론의 수용자와 정당 지지자의 중복, 언론인의 역할 정향이나 실천과 정당의 노선과의 일치성이라는 네 가지 차원에서 ‘경험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몇 가지 난점<sup>3)</sup>에도 불구하고, 이 개념은 우리에게 유용하다. 특히 그것이 오랫동안 언론을 정치권력과의 포섭 관계 혹은 ‘통제’ 관계로 바라보았던 관점을 양자의 유기적인 결합 혹은 담합이라는 행위자적 차원으로 논의를 확장시킬 수 있다는 차원에서 그러하다.

그럴 경우 몇 가지 쟁점이 나타난다. 우선은 금방 살펴본 논의들이 정치와 언론의 관계에서—비록 민주화 국면 이후를 상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 하더라도—지나칠 정도로 언론의 우위를 전제하고, 그럼으로써 언론의 정파성을 과잉 평가하는 경향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심화가 언론 산업의 성장을 가져오고 그 과정에서 정파성이 더욱 강화되는 현상—소위 ‘민주화의 역설’(최영재, 2014)—이 두드러진다. 그것은 정치-언론 병행관계의 극도의 비조응성에 해당한다. 특히 정당의 역할이 매우 지지부진하였던 한국 정치 특유의 과정이 큰 영향을 끼쳤다는 주장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 다만, 문제는 너무 많은 연구들이 한국의 정당구조의 미성숙성을 언론 권력의 비대화의 결정적인 원인으로 간주하는 ‘편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양승목, 1995; 박승관·장경섭, 2000; 이준웅 외, 2010; 조항제, 2014). 하지만 이는 한국 민주주의의 ‘공고화’ 과정에서 언론 자율성이 어떤 형태로든 신장된다는 논리적 연쇄에서 고려되어야 할 전제들을 가볍게 여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부분적으로 정치-언론 병행관계 이론이 가지는 규범적 가정에서 유래한다.

3) 이 개념은 무엇보다 정치 체계와 언론 체계의 상호작용 방식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을 마련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으며(이준웅 외, 2010, 98쪽), 또 결정적으로 많은 나라의 미디어 체계를 궁극적으로 ‘영미권 모델’이라는 규범적 기준으로 수렴되는 것으로 파악하게 되는 명백한 단점을 안고 있다(Hallin & Mancini, 2011).

이 문제는 바로 국가와의 관련성이라는 전문직 프로젝트의 핵심적인 단위에 관한 것이다. 국가는 결코 자율성과 전문직 모델의 확산에 따라 자신의 행위 영역을 제한하는 주체가 아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만(Mann, 1993)의 논의처럼 (서구 사회의) 권력 네트워크(power network)의 구축 과정에서 나타나는 국가와 사회의 ‘실천의 순환(circuits of praxis)’에 대해 보다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만은 “국가는 다양한 형태로 결정화(crystalized)되어서 자국 영토의 구석구석에 침투하며, 역으로 시민과 정당 역시 국가 속으로 침투해 들어간다”고 말한다(Mann, 1993, 75). 그런 면에서 보자면 정당 체제의 미성숙의 공간을 침투해 들어간 것은 국가가 자신의 주도 하에 언론과 새롭게 맺게 된 ‘다형태적(polymorphous) 권력 네트워크’라고 말할 수 있다. 전문직 언론인들은 바로 이러한 권력 네트워크의 구성원이자 동시에 내부적 비판자로서, 특정한 형태의 정치적 기대/압력을 동시에 받으며 일하게 된다. 그 속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신념과 공(식)적 이데올로기 간의 ‘불화’ 혹은 억압적 관계를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역사적 시기의 구조적 맥락—즉 권력 네트워크—에서 언론인들이 겪은 ‘정치적 기대’와 ‘압력’이 작동하였던 방식에 대한 보다 상세한 기술과 검토의 과정이 보다 중요해진다.

이와 관련하여, 이명박 정권의 출범 이후 언론과 정치권력의 네트워크가 새로운 환경 속에서 자신들의 ‘과거’의 지배 구조를 폭력적으로 회복하고자 시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실적인 마찰음을 보다 상세히 관찰할 필요성이 있다. 종편의 출범이 현실화되었고, 그 과정에서 ‘조중동’으로 통칭되는 일부 언론사의 영향력은 보다 확대되고 있다. 정치적인 차원에서 이는 ‘민주주의의 공고화’라는 그동안의 신념에 반하는 ‘보수적 헤게모니의 공고화’ 국면으로 진단될 수 있으며, 그 속에서 ‘보수적 지배 연합의 헤게모니와 지배블럭 내부로의 언론의 편입’(강명구, 2004)은 더욱 가속화되는 측면이 있다. 이 시기부터 언론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다양한 통제 요인들에 대한 수많은 실증적 비판이 제출되고 있으며, 특히 2008년 이후 한국 언론에서 나타났던 일련의 갈등 상황에 대한 분석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김연식, 2014; 최영재, 2014). 하지만 문제는 그러한 폭력적 회복의 시도가 단순한 정치적 권력 유지의 목적과 더불어 (2008년 사태 이후) ‘신자유주의’로 통칭되는 지배 체제 전체의 위기에 대한 대처, 나아가 언론 산업 전체의 경제적 기반의 붕괴와 대처의 어려움, 이에 따른 미래의 불확실성 문제와 겹쳐져 있다는 점이다.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민주주의의 여러 요소들(정당, 권력구조, 법적 제도 등)에서 질적인 차별성과 불균등성의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 모든 요인들은 결국 한국 언론의 전문직 프로젝트 자체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주요한 쟁점들이다.

### 3) 스스로에 대한 과장 혹은 비하: '권력화'를 향한 전문직 프로젝트?

한국 언론의 역사는 정치적 자유의 신장과 민주주의의 성장이 반드시 전문직주의의 활성화를 가져오지는 못한다는 점을 수없이 보여주고 있다. 이 절에서는 그 중에서 언론인 스스로가 자신의 전문직 위상을 과도하게 비하하거나 혹은 과장하는 모습에 주목해 보고자 한다.

전문직 프로젝트의 출발점은 자신들의 경제적 불안전성 및 사회적 지위의 불안전성을 타파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결여된 상황에서, 자신들의 직업적 자율성의 총체적인 고양을 목적으로 구축되는 일련의 행위 전략이다. 이정훈·김균(2006, 63쪽)은 1960년대의 경험을 되짚으면서, 당시 언론인의 낮은 경제적 처우를 그동안 보상해 주었던 사회적 기제(즉 지사로서의 명예 및 사주와의 조직 내적인 동지적 유대 관계)들이 사라져 가는 상황에서, 잃어버린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으로 전문직주의의 이념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고양되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후 한국 언론의 전문직 프로젝트는 대체로 사회적·경제적인 지위 상승, 그리고 이를 위한 정치적 권력의 획득을 핵심적인 행위 전략으로 삼아 왔다. 그러한 양상은 자신의 직업적 정체성이 민주주의·객관성·자율성의 규범에 근거한다고 확신하는 소수의 언론인 집단의 행위 전략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언론인의 작업 만족도, 나아가 '직업적인 자존심'의 근거에 관한 남재일(2006)의 연구는 그런 면에서 시사적이다. 그는 김영삼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에 이르는 청와대 출입기자들의 경험을 인터뷰를 통해 추적한다. 그리고 인터뷰를 한 대부분의 기자들은 직업 만족도 및 직업적인 자존심이라는 차원에서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자유가 신장된 것보다 취재 여건과 청와대 기자의 지위 하락에 대해 더 집중적으로 이야기했다"고 언급하면서, "언론의 자율성이 신장될수록 직업적 만족도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말한다(남재일, 2006, 118~119). 한국의 저널리스트들의(상층) 일부는 스스로의 직업적 정체성을 대통령과 같은 고위관료나 사회 지도층 인사들과 '함께 논다'는 자부심을 통해, 그리고 '자신들을 정치권력의 한 단위로 상정하는' 것을 통해 형성시켜 나가는 행위 전략이 확산되는 모습이 여기에 그려지고 있다.

전문직 프로젝트의 이러한 측면은 그런 면에서 언론의 정치병행성에 관한 테제 및 그와 관련된 '후견주의(clientelism)'에 대한 평가를 수정하게 만든다. 전문직 프로젝트가 궁극적으로 국가와 전문직 저널리스트의 상호침투를 통한 권력 네트워크의 형성을 불가피하게 촉진시키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이 상호침투의 양상은 매우 특수한 것이었다. 조항제(2014)의 언급처럼 정치적 종속에 따른 반대 급부로 언론 산업 자체의 카르텔화를 촉진시키고 언론 산업을 결정적으로 성장시키는 경제적 보상이 있었고, 또 강명구(2004)의 지

적대로 언론인 개개인의 ‘정계진출’ 등을 통한 정치-언론의 인적 네트워크 창출이라는 혜택이 있었다.<sup>4)</sup> 물론 이는 한국의 전체 언론계에서 극히 일부 상층의 사례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문제는 이 같은 정치 종속적인 집단적 특권의 취득이 한국의 전문직 프로젝트를 사실상 대표하는 행위 전략으로 자리매김 된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이다. 이는 역으로 한국의 전문직 프로젝트가 내적으로 이러한 충동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을 가지기 어려웠고, 이에 대한 대안적 전략을 구사하지 못하였다는 뜻이다.

첫째, 소수의 ‘일탈’을 내부적 규율을 통해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매우 취약한 편이다. 저널리스트 개개인이 차지하는—혹은 차지해야 하는—사회적 지위에 대한 합의는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언론인의 법적 지위, 자격증 혹은 프레스카드 등의 제도들은 정권 차원에서 억압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던 역사적 기억으로 인해 오늘날까지 활발한 논의의 대상으로 떠오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들이 사실 스스로를 개별 언론사의 ‘피고용인’ 신분에서 탈피시키면서 자신들의 공익적 활동의 제도적 원천으로 기능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들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신광영(2012)의 지적대로 언론사 노동조합들은 공익보다는 자신의 조직의 사익을 위해 활동한다는 사회적 편견에 시달리고 있으며, 보수 정권 하에서 이러한 편견은 한층 강화되고 있다.

둘째, 전문직 저널리스트 집단 자체의 분화 및 내적 경쟁의 상황에서 공동의 전문직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는 내적 동력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언론산업 전체의 경제적 위기는 이렇게 각 매체사별, 그리고 매체 간의 내적인 경쟁과 상호 견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이는 한편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언론계 내부적으로 나타나는 현격한 수입의 격차 문제를 야기한다. 동시에 언론계와 여타 사회직종들 간의 지위 격차 문제도 여전히 나타나면서, 언론인 스스로가 보다 대안적인 전문직 프로젝트를 추진할 사회적 동력을 지속적으로 저하시키고 있다.

셋째, 디지털 뉴스 생태계로의 전환은 그동안 저널리스트들이 사회적 폐쇄의 원천으로 활용하였던 전문적 지식과 기술 자체를 탈신비화 시키고 있다. 이제 시민 저널리즘을 포함한 다양한 영역의 저널리즘 실천은 일반화되고 있지만, 한국에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직 저널리즘의 독자적인 지식과 기술을 주장하는 사례는 그리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4) 다음의 진단은 현재 한국의 공영방송 보도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을 기술한 것이다. “공영방송은 정치권력의 보도국 침윤과 내용 간섭을 방어할 만한 전문직주의 또는 저널리즘 문화를 갖추고 있지 못했으므로 공영방송의 정치종속 현상은 경영진의 단계를 넘어 보도국 조직까지 확대됐다. 그때까지 권위주의 정권 아래서 권언유착 관행의 잔재가 고스란히 남아 있던 한국 공영방송사의 보도국은 정치권력의 영향력 확대를 오히려 내재화하는 경향까지 보였다”(최영재, 2014, 490쪽).

(박진우·송현주, 2012). 오히려 전문직 저널리즘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그다지 '전문적이 지 못한', 혹은 전적으로 전문직 규범을 위배하는 행위들이 디지털 독자들의 눈에 더욱 빈번히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뉴스 퀄리티의 심각한 저하에서 드러난다. 동시에 대형 언론사들이 주도하는 뉴스 유통 및 광고영업 관행에서 나타나는 일탈적 양상 또한 매우 심각한 대중적 불신의 대상이다(이정환 외, 2015).

이와 같은 한국식 전문직 프로젝트의 특성은 어쩌면 언론 자유의 신장을 정파성 강화로 귀결시키고, 이를 국가와 결합된 권력 네트워크에 의해 체계적으로 재생산하는 과정과 병행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한국 언론의 전문직 프로젝트의 역사적 과정이 산출한 냉엄한 현실이자 그 결과물인 셈이다.

#### 4. 새로운 과제: 전문직주의의 탈신화화 그리고 전문직주의의 재발명

한국 언론의 전문직주의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면서 이 글은 해답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질문을 던져 보고자 노력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 언론의 전문직주의를 진단하는 새로운 이론적 관점을 채택하고, 현실적인 변화의 상황을 보다 냉철하게 관찰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논의는 결국 이론적·실증적 차원에서 전문직주의의 오랜 모델 자체에 대해 새로운 태도로 접근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한국 언론과 저널리스트들의 현재 상황을 진단하면서 반드시 오랜 전문직주의의 규범을 절대시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하는 인식에서 이 연구는 시작되었다. 그보다는 전문직주의가 오늘날 어떤 형태로 거론되면서 저널리스트의 직업적 정체성 형성의 원천으로 기능하고 또 이데올로기의 차원에서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메커니즘을 파악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는 전문직주의 자체의 구조적 현실에 대한 이해를 통해 역으로 한국 언론의 속성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관점을 전환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확인하였던 사실은 전문직과 전문직주의를 둘러싼 대다수의 가정들은 아직도 그 기본 모형의 구성 요소들을 여전히 충분히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전문직주의라는 규범적 기준이 작동하는 방식 또한 개별 지역이나 사례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요인들이 전문직화의 추동력으로 작용하거나 아니면 그것의 저해 요인으로 작동하게 되는 양상들이 나타난다. 그것이 디지털화된 후기산업 사회에서 과연 해당 직종의 전문직화를 강화할 것인지 혹은 탈전문직화의 추세로 나아가게 될 것인지를 예상하기도 매우 어렵다. 그런 면에서 전문직주의를 둘러싼 다수의 이론적 가정들의 이론적 연쇄와 그 작동의 사슬들을 결코 당연시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다.



또한 이 연구는 한국 언론의 전문직 프로젝트를 한국 언론이 언론 산업 및 국가 권력과 맺고 있는 구조적인 연관 관계를 파악하는 중요한 매개체로 설정해 보았다. 이 연구는 규범과 현실이 지속적이고 구조적으로 불일치의 양상을 보여준다면, 규범적 원칙에 기대어 한국 언론의 구조를 설명하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런 측면에서 ‘미디어 시스템’ 이론 모델이 상정하는 언론 정치 병행관계라는 이론적 틀 속에서 한국 언론이 처해 있는 구조적인 쟁점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전문직 프로젝트의 개념을 통해 설명할 수 있는 몇 가지 요소들을 해명해 보고자 시도하였다. 우선 한국 언론에서 나타나는 전문직주의 규범과 현실의 단절 혹은 상호 대립의 양상들에 대한 설명에 이어, 언론 기업의 성장과 국가 권력의 개입의 비대칭적 관계에 대한 해석을 시도해 보았다. 그 과정에서 한국 언론의 전문직 프로젝트는 사실상 자신의 전문직으로서의 위상 자체에 대한 불인정 혹은 비하의 과정 속에서 서서히 좌초해 가는 것 아닌지를 되물어 볼 수 있었다.

사실 이 연구에서 살펴본 한국 언론의 전문직 프로젝트의 현실은 ‘전문직(주의)’ 규범에 거의 부합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러한 현실 자체가 규범 혹은 전문직 프로젝트 그 자체의 생명력을 훼손시키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러한 현실적 과정은 한국 언론에서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던 전문직 저널리즘이라는 신화 자체에 대한 도전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또한 디지털 환경으로 급속히 이행하는 현실 속에서 전문직주의를 새롭게 진화시켜 나가고자 하는 의지의 표명일 수도 있다. 어쩌면 전문직의 개념이 한마디로 ‘방송 뉴스의 시대(Age of broadcasting news)’, 즉 제한된 미디어 선택과 단일한 뉴스 정당성이 유지되는 시대의 패러다임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Williams & Delli Carpini, 2011). 하지만 전통적인 패러다임의 저널리즘이 독점적으로 고수해 왔던 직업적 권위의 해체가 야기할 수 있는 불안을 진단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해법을 찾는 과제 또한 우리에게 부여된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 과정에서 이 논의가 대답하지 못한 또 한 가지 문제 - 전문직주의와 전문직 프로젝트가 현재 한국 언론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또 다른 대안적 개념으로 어떻게 진화할 수 있을 것인가 - 에 대한 해답을 찾아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 참고 문헌

- 강명구 (2004). 한국 언론의 구조변동과 언론전쟁. <한국언론학보>, 48권 5호, 319-348.
- 김경모·신의경 (2013). 저널리즘의 환경 변화와 전문직주의 현실: 반성적 시론. <언론과학연구>, 13권 2호, 41-84.
- 김연식 (2014). 방송 저널리스트의 방송 통제요인 인식 변화 연구: 2008년과 2013년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8권 1호, 285-305.
- 남재일 (2006). 1987년 민주화 이후 취재관행에 나타난 정권-언론 관계 변화: 청와대 출입기자의 경우. <한국언론학보>, 50권 4호, 95-124.
- 남재일 (2008). 한국 객관주의 관행의 문화적 특수성: 경찰기자 취재관행의 구조적 성격. <언론과학연구>, 8권 3호, 233-270.
- 박승관·장경섭 (2000). 한국의 정치변동과 언론권력: 국가-언론 관계 모형 변화. <한국방송학보>, 14권 3호, 81-113.
- 박진우·송현주 (2012). 저널리스트 전문직에 대한 인식의 변화: 전문직 노동과 직업 전망에 대한 위기의식. <한국언론정보학보>, 57호, 2012년 봄, 49-68.
- 박진우·김설아 (2014). 언론인의 양심 보호 조항을 통한 편집권 독립 및 내적 언론자유의 재검토: 프랑스의 법제와 판례 연구. <커뮤니케이션이론>, 10권 4호, 359-397.
- 신광영 (2012). 한국의 민주화, 시장화와 언론노조운동. <한국언론정보학보>, 57호, 2012년 봄, 69~82.
- 양승목 (1995). 한국의 민주화와 언론의 성격 변화: '자율언론'의 딜레마. 유재천 (외). <한국사회변동과 언론>. 서울: 소화, 93-146.
- 유선영 (1995). 객관주의 100년의 형식화 과정. <언론과 사회>, 10호, 86-128.
- 윤영철 (1995). 사회변동과 언론통제. 유재천 (외). <한국사회변동과 언론>. 서울: 소화, 181-225.
- 이정훈·김균 (2006). 한국 언론인의 직업 정체성: 샐러리맨화의 역사적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0권 6호, 59-88.
- 이정환·정철운·김유리 (2015). <저널리즘의 미래>. 서울: 개마고원.
- 이준웅·조항제·송현주·정준희 (2010). 한국사회 매체 체계의 특성: '민주화 이행 모형'의 제안. <커뮤니케이션 이론>, 6권 1호, 87-143.
- 임영호 (2006). 언론인의 직업 모델과 전문성 문제. 한국언론학회 (편), <위기의 한국 언론>, 나남, 2006, 233-281.
- 정태철 (2005). 언론 전문직업인주의(professionalism)의 필요성: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언론의 문제와 개혁에 대한 논의. <언론과학연구>, 5권 2호, 417-454.
- 조항제 (2014). 한국의 민주화와 언론의 자유·언론학에 대한 비판적 성찰. <커뮤니케이션 이론>, 10권 2호, 41-76.
- 최영재 (2014). 공영방송 보도국의 정파적 분열: 민주화의 역설, 정치적 종속의 결과. <커뮤니케이션 이론>, 10권 4호, 476-510.

- Abbott, A. (1988). *The System of Profession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enson, R. & Neveu, E. eds., (2005). *Bourdieu and the Journalistic Field*. London: Polity.
- Carlson, M. & Lewis, S. C. (eds.). (2015). *Boundaries of Journalism: Professionalism, Practices and Participatio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Christians, C. G., Glasser, T., McQuail, D., Nordenstreng, K., and White, A. (2009). *Normative Theories of the Media: Journalism in Democratic Societies*.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 Durkheim, E. (1905). *Leçons de sociologie*. Paris: PUF; 김종엽 (옮김). (1998). <직업윤리와 시민도덕>. 서울: 새물결.
- Evett, J. (2011). A New Professionalism?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Current Sociology*, 59(4), 406-422.
- \_\_\_\_\_. (2013). Professionalism: Value and ideology. *Current Sociology*, 61(5-6), 778-796.
- Freidson, E. (2001). *Professionalism: The Third Logic*. 박호진 (옮김). (2007). <프로페셔널리즘: 전문직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과 전망>. 서울: 아카넷.
- Hallin, D. & Mancini, P. (2004). *Comparing media syste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김수정 · 백미숙 외 (옮김). (2010). <미디어 시스템의 형성과 진화>, 서울: 한국언론재단.
- \_\_\_\_\_. (2011). *Comparing Media Systems beyond the Western World*. Cambridge an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ughes, E. C. (1963). Profession. *Daedalus*, 92(4), 655-668.
- Joseph, B. (2013). De-coupling journalism and democracy: Or how much democracy does journalism need? *Journalism*, 14(4), 441-445.
- MacDonald, K. (1995). *The Sociology of the Professions*. Thousand Oaks: Sage. 권오훈 (옮김). (1999). <전문직의 사회학: 의사 · 변호사 · 회계사의 전문직 프로젝트 연구>. 서울: 일신사.
- Mann, M. (1993). *The Sources of Social Power: Volume 2, The Rise of Classes and Nation States 1760-1914*.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erone, J. (2013). The Historical Roots of the Normative Model of Journalism. *Journalism*, 14(4), 446-458.
- Sarfatti-Larson, M. (1977). *The rise of professionalism*.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Schudson, M. and Anderson, C. (2009). Objectivity, professionalism, and truth seeking in journalism. in Karin Wahl-Jorgensen and Thomas Hanitzsch, eds., *The Handbook of Journalism Studies*.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88-101.
- Waisbord, S. (2013). *Reinventing professionalism: Journalism and news in global perspective*. London and New York: Polity.
- Williams, B. and Delli Garpini, M. (2011). *After Broadcast News: Media regimes, democracy, and the new information environmen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투고일자: 2015. 09. 30 게재확정일자: 2015. 11. 20 최종수정일자: 2015. 11. 23

# Professionalism and Professional Project of Korean Journalism

## Considerations on Historical Context of Press-Politics Parallelism

**Jin-Woo PARK**

Assistant Professor, Konkuk University

This paper aims to plan a new research program on the parallel relationship between Korean press and political power, by providing concepts on the mode of existence of professional journalists in Korea. In the midst of the economic crisis of Korean journalism, relative deterioration in the political democracy and the liberty of press, and changes in news ecosystem due to the revolution of digital news, the status of professional journalists is at stake. In these circumstances, this paper argues that many existing researches on journalistic professionalism need to be reconstructed in the perspective of professional project. It enables, first of all, an evaluation on actual issues of professional journalists from the actor perspective, i.e. economic interests, social closure, regulative bargain with the authority. Secondly, concerning decoupling phenomenon of journalism and democracy which became salient in the contemporary society, this study raises a necessity to create new logical relations around concepts of journalist professionalism. And we will find, in this situation, a beginning of new evaluation on the mode of existence of professional journalists, that has been possibly developed within the old, assymmetric relationship between State-press. And finally, this study proposes to consider a category of professional journalists as a vehicle that helps to conceptualize the old, parallel relationship between Korean press and political power.

**KEYWORDS** Media System, Press-Politics Parallelism, Professionalism, Professional Project